

‘비상계엄’ 위헌·위법 판단 없었다... 尹 탄핵심판 예측 힘들어

내란방조 관련 증거·자료 부족 ‘헌법재판관 불임명’ 의견 엇갈려 일각선 ‘비상계엄’ 배제 비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탄핵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다. 현재는 한 권한대행의 ‘내란 방조’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불임명은 위헌 행위인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부분에서 의견이 갈렸다. 의결정족수 151석에 대해서도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단서는 제공되지 않았다.

특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겹치는 ‘내란 묵인·방조’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 2명을 뺀 6명의 의견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는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주장에 대한 증거나 객관적 차료를 찾을 수 없어, 묵인·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거기에도 현재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 묵인·방조’를 행했는지에 대한 부분

현재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판단

 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정형식	 조한창
진보 기각	진보 기각	중도 기각	중도 기각	중도 보수 기각	진보 인용	보수 각하	보수 각하
특검 재의요구권, 비상계엄, 공동 국정운영, 특검 미추천 등은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어.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법률위반, 다만 파면 정당화 사유는 안됨.				헌법재판관 미임명도 헌법과 법률 위반 아냐.		특검 미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파면 정당화할 수준.	

자료: 헌법재판소

/뉴스시스 그래픽

만 판단을 내렸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앞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보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가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주고 싶지 않아서 판결문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을 담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가장 많이 의견이 갈린 지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임명 부작위’였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인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는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역시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헌임에도 기각 의견을 낸 4인의 재판관은 위반의 정도는 무겁지만

파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과장 사이에서 어떤 쪽이 더 손실인지를 판단했다는 의미다.

아울러 현재는 탄핵소추안을 151석으로 가결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

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정족수인 200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는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위원이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뿐이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과반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날 현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도록 나왔다. 한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한 판단만 있었을 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때문에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나는 그 순간까지도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며 진영 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정략적 탄핵 재확인” 野 “국민이 납득하겠나”

여권, 연쇄 탄핵 부당성 지적 야권,尹 대통령 선고 촉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24일 기각되자, 여권은 일제히 메시지를 내며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야권은 유감을 표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관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의 기각 결정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결과”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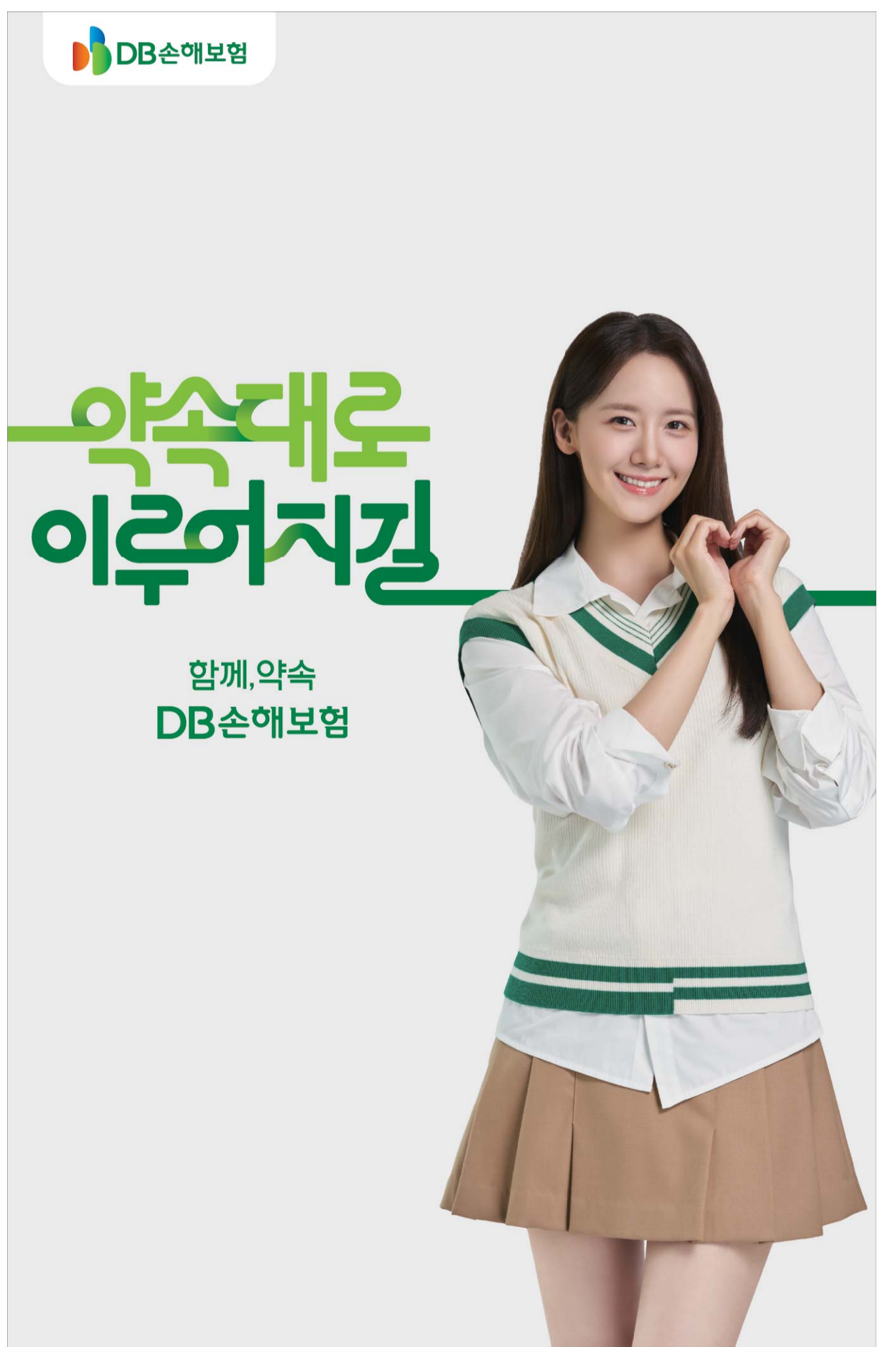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현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하고, 민주당의 국무위원 쫓겨탄핵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기각 소식을 접하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결정이나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겠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나.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 촉구 결의안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줄 때”라며 “재적인원 4분의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전원위를 열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전원위가 열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DB손해보험

약속대로 이루어지길

함께, 약속 DB손해보험